/ 용산참사 수사 발표 반응 /

"짜맞추기 … 특검제 도입"

민주, 7대 의혹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

민주당은 9일 용산 재개발 사망사고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대해 '면피용,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 특별검사제 카드를 꺼내들며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기가 막힐 노릇으로, 어떻게 이런 발표가 있느냐"며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체 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기정 의원은 9일 용산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발화 지점 등 화재 원인에 대한 검찰 발표가 현장에 있던 소방관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압 당시 역할 ▲무전녹취록 추가 확인 ▲미공개 무전에 대한 수사 결과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다.

용산참사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은 "검찰이 면피용 짜맞추기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런 수사 결과는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10일 청문회 이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우윤근(오른쪽)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용산재개발 사고관련 특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자 사퇴 급하지 않다"

李 대통령 "원인규명 통한 근본 대책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용산 사고'와 관련,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시급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차 라디오연설에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야 말로 대통령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고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원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집권 2년째의 화두가 '원칙'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청와대는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조만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이미 김 내정자를 자진사퇴 형식을 밟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르면 10일이나 11일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출마' 논란 확산 조짐

정 대표·의원단체 잇단 모임

당내서도 부정적 시각 우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4·29 재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마뜩잖게 생각하는 정세균 대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의원 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 논란은 계속 확산할 조짐이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충북 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데 이어 9일 전북, 11일 전남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지만 자연스럽게 정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386 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성향의 모임인 '개혁과 미래(개미모임)'도 9일 저녁 만찬회동을 가졌고,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역시 10일 자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 측근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동작구가 맞다"며 "적어도 수도권이 옳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 전 장관이 현재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이 일반적 공천 절차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결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계의 비판이 이처럼 거세지는 것은 정 전 장관이 출마의 뜻을 굳히고 발표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식발표 전 여론몰이를 통해 출마 의지를 꺾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 전 장관 측 김영근 전 공보특보는 반박문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특보는 "정 전 장관은 '생각해서 판단하겠다'고만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며 "정 대표 대세몰이의 들러리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전에서 정 전 장관과 일합을 겨뤘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고 제정구 의원 10주년 추모식에 참석, 두달만에 공개행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역시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아꼈다. 정 전 장관이 재선거 출마설을 흘리며 당을 분란에 휩싸이게 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조용한 행보만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핵·개방 3000 수정 용의 없나"

민주, 현인택 내정자 대북관·부동산 의혹 등 추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현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나서 현 내정자의 도덕적 결함을 제기하며 궁지로 몰아넣었다.

여야 의원들은 현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과 대화 복원 측면에서 내정자가 대화를 복구하기는커녕 중단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원만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비핵개방 3000 정책이 남북경색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는 "비핵개방 3000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정책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는 정반대로 한반도에서 공존·공영하자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론에 찬성했다는 추궁도 있었다.

도덕적 하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고려대에서 BK21 사업을 신청할 때 등록한 논문이 허위등록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2003년 논문에 포함된 영문초록이 2005년 BK21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에 자기표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내정자는 "자기표절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영문초록은 요약본으로서 논문의 일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부동산 변칙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 내정자의 부친이 지난 2006년 2월 A씨에게 제주시 연동 S운수와 함께 제3자에게 판 165㎡ 대지를 현 내정자가 10여일 뒤 다시 사들였다"며 "실제 매매가는 1억3천360만원으로 공시지가인 1억4천850만원보다도 싼 가격에 샀다"고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현 내정자는 "제 부친이 올해 90세가 다 돼 도저히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타자에게 매각하면 30년 동안 같이 일해왔던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며 "그래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실직을 우려해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X파일' 공개 노회찬 집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 · 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전 의원이 나오지 않자 "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에게 줄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만 담겼지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2007년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영산강 뱃길복원 토론회

민주 최인기 의원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사진)은 10일 오후 2시 나주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영산강 살리기 뱃길 복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29일 영산강 생태공원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간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 의원이 관련 전문가 및 정부 측 인사를 초청해 마련한 자리.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함평·영광·장성)과 이윤석 의원(무안·신안),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종부세 완화 대책 촉구

한, 박재순 최고위원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완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심한 재정 파탄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1조1천억원(38.5%), 세제 개편으로 인해 3천400억원(11.9%) 등 모두 1조4,400억원(50.4%)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전남의 경우 1천129억원, 부산은 약 500억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